

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6. 3.



대전지방국토관리청

1. 일반 현황

1. 연혁

- 1962. 6 : 건설부 중부국토건설국 설치
- 1975. 6 : 충청남·북도지방국토관리청 분리
- 1979. 6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

2. 주요 임무

- 도로 건설사업의 시행 및 관리
-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
-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 관리
- 지역 교통안전 계획 조정 및 권역별 대책 수립

3.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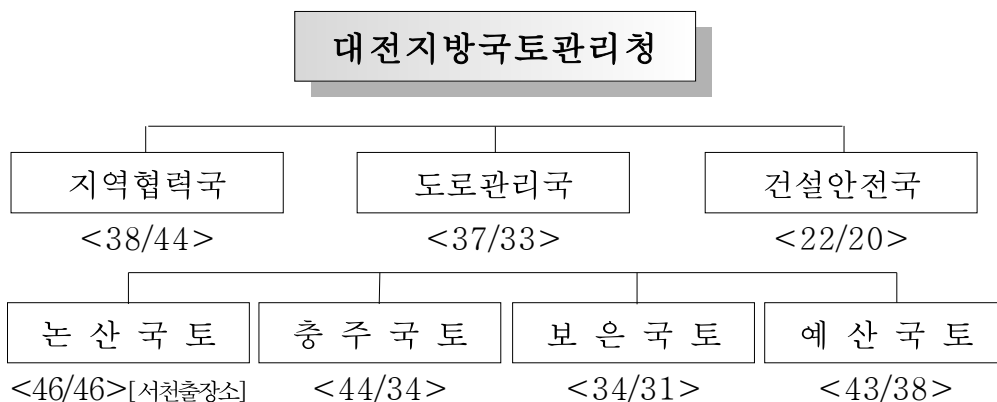
(’26.1.5 기준)

◆ 3국 4개 국토관리사무소(1출장소)

◆ 264명(정원) / 257명(현원)

○ 본청(97명 / 97명), 국토관리사무소(167명 / 149명), 휴직 11명

* 청원경찰 4명, 공무원(도로보수원 등) 244명 별도



4. 관할 구역

□ 관할구역 일반현황

[‘25. 12. 기준, 단위(km², 만명, km)]

구 분	전 국	관 할 구 역			
		계	대전	충남·세종	충북
○ 면 적(km ²)	100,459	16,659 (16.6%)	540	8,712	7,407
행정구역수	77시82군69구	11시 15군 5구	5구	8시 7군	3시 8군
○ 인 구(만명)	5,112	557 (10.9%)	144	253	160
○ 일반국도(km)*	14,278	2,530 (17.7%)	84	1428	1018
- 4차로 이상 (4차로율 %)	8,667 (60.7%)	1,883 (21.7%) (74.4%)	84 (100%)	1092 (76.5%)	707 (69.4%)

* 일반국도 : 20개 노선 2,530km(대전청 1,721, 위임국도 556, 시 관내 253)

5. 예 산

[‘26. 2. 12. 기준, 단위(억원, %, 건)]

사 업 별	‘26예산 (A)	‘25예산(최종) (B)	증 감 액		사업량	비 고
			(C=A-B)	비율(C/B)		
합 계	4,736	18,113	-13,377	-73.9	48	본예산 기준 이월예산(728억) 추가 시 총 5,464억
국도건설 등 (건설지원예산 포함)	2,048	4,242	-2,194	-51.7	48	
도 로 관 리	2,367	5,234	-2,867	-54.8	-	
민 자 도 로	98	8,170	-8,072	-98.8	-	
지 역 개 발	157	258	-101	-39.1	-	
경 상 비 등	66	209	-143	-68.4	-	1분기 배정액

* 사업별 비율 : 국도건설 등 43.2%, 도로관리 50%, 지역개발 3.3%, 민자도로 21% 경성경비 등 1.4%

II. 2025년 주요 업무실적

1. 주요 성과

□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현장 안전 강화

- (작업현장 안전) 위험공종·주요작업 등 청장, 국·소장 전담 소통방을 청·직영현장(도로보수·과적단속)으로 확대하여 관리 감독 강화
 - * 낙상감지 안전조끼, 어깨 경광등, 에어타워 등 작업자 안전·야간시인성 개선 장비 도입
- (건설현장점검) 건설 현장 총 607개소(소규모 현장 303개소) 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여
 - ※ (충청권 건설사고 사망자 수) '23년 29명 → '24년 18명 → '25년 17명
- 고용노동부(대전지방고용노동청)와 안전점검 협업체계 구축('25.3.) 및 안전·시공·품질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 확보
- (지하안전관리) 지하안전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지하안전평가서 협의 및 이행여부 조사 등을 통해 지반침하사고 예방
 - * 소규모 23개소, 본평가 23개소, 총 46개소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조사 완료
- (품질관리) 청 건설현장* 품질관리 점검으로 품질확보 및 충청권 건설자재 생산공장 실태점검**으로 부적합 자재 생산근절
 - * 19개 현장(품질관리계획: 12개, 품질시험계획: 7개), 시정명령: 43건
 - ** 60개공장(208건 지적): 레미콘 50개공장(176건 지적), 아스콘 10공장(32건 지적)

□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

- (재정집행) 1분기 66.4%, 상반기 81.9%, 연말 95.7%(지출결의 기준 96.4%) 집행으로 5개 국토청 중 집행률 1위 달성(BSC 재정집행 가점* 최대치(0.5점) 획득)
 - * 전년 대비 개선 및 부 평균 이상 달성(상·하반기, 지출결의 기준)
- (도로망 확충)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전구간 개통 및 청주 외곽 순환망 완성 등으로 충청권 H2O 간선도로망 723km중 89.1% 확충

- (충청내륙) 충청내륙 전구간 개통으로 충청권 거점도시 연계 강화

구분	충청내륙1-1	충청내륙1-2	충청내륙2	충청내륙3	충청내륙4
지역	청주,증평	증평,음성	음성,충주	충주	충주,제천
연장	10.5 ^{km}	12.6 ^{km}	13.3 ^{km}	8.2 ^{km}	13.2 ^{km}
개통	'24.12(준공)	1단계:10 ^{km} (`24.12) 2단계:2.6 ^{km} (`25.05)	3-1단계:6.6 ^{km} (`25.09) 3-2단계:6.7 ^{km} (`25.11)	3-2단계:4.0 ^{km} (`25.11) 4단계:4.2 ^{km} (`25.12)	4단계:13.2 ^{km} (`25.12)

- (청주 순환망 완성) 북일남일1 잔여구간(국동교차로) 개통으로 순환망 완성(12.30.)

* 남면~북면(`10년), 오동~구성(`11년), 휴암~오동(`14년), 북일~남일2(`23년), 북일~남일1(`25년 개통)

○ (지역경제 활성화) 지역행사장 인근의 도로공사를 개최 전에 조기 개통하여 안전한 행사장 접근환경 조성으로 지역관광산업 적극 지원

* 영동군 국악엑스포 개최전 영동-용산1-2 부분 개통(`25.9.) 및 제천시 국제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 개최전 충청내륙 부분 개통(`25.9.)

□ 안전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

○ (교통안전협의회) 상급기관(18개) 간* 협의회 운영, ITS(CCTV) 모니터링 공유** 추진 및 합동 개선방안 마련 등 교통대책 실효성 강화

* (협의회) 대전국토청주관, 광역지자체(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), 경찰청(충남, 충북, 세종) 등

** (ITS 모니터링 공유) 긴급상황 발생 시, 각 기관이 우회도로 등 상황 동시 모니터링

○ (취약구간 ITS연계) 관내 소 터널(지하차도) ITS연계 및 원격관제 조치, 공사현장은 APP*과 연계하여 실시간 작업정보 공유(VMS, 내비社 제공)

* (도로안전지킴이) 현장작업자가 사용하는 APP으로 공사위치, 시간 등 작업정보 입력 가능

○ (감응신호 구축) 국도 29호선 서산~대산 37개 교차로 감응신호 구축 후 출·퇴근 차량 통행시간 감축(13~18%) 및 통행속도 개선(↑13%, 5.6km/h)

○ (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) 관내 민자고속도로 3개소의 운영단계 안전강화 방안 마련, 개선대책 수립·시행으로 사고저감

* 교통사고 모니터링 결과 사고 반복 발생구간(3개소)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개선대책 시행, 교통사고 44.5% 저감(18건→10건)

○ (재난안전 관리) FMS 누락시설물 전수조사로 신규등록·안전점검 시행 하고 우기 전 전년 수해지역·취약시설(사면·옹벽 등) 사전 점검 및 보수·보강

* 배수시설(수로암거·집수정·우수관로·토사준설), 배수체계 개선을 통해 침수 예방

□ **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으로 건설현장 신뢰 구축**

- (공정건설)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전담인력 확대, 지역협의체 협업점검 및 불공정행위 대응기관 교육·홍보물 지원 등 단속체계 강화*
* 점검대상 확대('24년 92개소 → '25년 115개소) 및 불공정행위 위법사항 적발율 약 16배↑
- (전자카드) 발주공사에 대해 노무비 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-하도급지킴이 상호 연계를 추진하여 '25.12월 연계율 100%* 달성
* (당초 목표) 6월말 기준 50%, 12월말 기준 70%

□ **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토교통 행정서비스 제공**

- (민원·부패) 민원 도래 알림 서비스를 도입(2분기)하여 민원처리 지연 감소*, 청렴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부패 취약요인 해소**
* 처리지연건수 : 1분기(9건) → 2분기(0건) → 3분기(3건) → 4분기(0건)
** 소속기관 반부패·청렴활동 평가시 '우수' 기관으로 선정
- (기술자문위원회) 특정공법 심의시 심의의원 당일 선정*, 위원별 평가사유서 작성 및 공개로 심의결과 신뢰성 확보
* 청렴지킴이 입회하에 담당 실무자만 참여, 부서장 및 사업부서 등 일체 비공개
- (미지급토지 보상) 장기 미해결 상태였던 국도로 이용중인 미지급 토지 보상 민원 다수* 해소
* 전체 239건중 156건 처리('25년 141건), 현재 83건 계류
- (국토사무소 관할 조정) 접근성·교통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관내 국토사무소간 관할구역 조정('26.1.1.)으로 국도관리 효율화
* (논산) 396.7→409.6km, (충주) 387.3→468.3km, (보은) 338.2→322.3km, (예산) 532.6→514.5km

2. 미흡한 점 및 보완방향

□ 충청권 건설현장 기술지원으로 사망사고 최소화 필요

- 충청권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점진적 감소 추세이나, 사망사고 3대 원인*은 최근 3년 동일 양상 발생

* (사망원인) 물체에 맞음(6명, 35%), 깔림(5명, 29%), 떨어짐(4명, 23%) 순이며, 매년 동일한 양상 ⇒ 물체에 맞음, 깔림, 떨어짐은 최근 3년 사망원인 상위 3개에 해당

- ☞ 3대 원인 사고발생현장은 해당 건설사 전 현장(충청권) 대상으로 합동정밀점검 시행, 사고 예방 안전교육 등 실시

□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필요

- 지하안전 이행조사 사업장 점검시기 파악 미흡 및 지하개발 증가에 따른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부족

- ☞ 굴착 초기 선제적인 이행조사*로 지반침하사고 예방 및 지반침하 위험 대응을 위해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

* ('25년) 연 1회 공사현황 파악 → ('26년) 연 2회(반기별) 공사현황 파악

□ 발주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발생

- 간부급이 참여하는 소규모 현장점검을 통한 지속적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도 사고건수 감축에는 일부 한계*

* (CSI 기준 사고건수) '23년 16건 → '24년 25건 → '25년 29건

- ☞ 건설현장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점검 내실화 추진

□ 충청권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달성 미흡

- '25년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^{10월기준}는 전년 比 37.5%(↓42명) 감소 하였으나, 전체 교통사고 건수^{12월기준}는 전년 比 12.5%(61건) 증가

* 충청권 국도 교통사고 추이 : '24년 486건 ⇨ '25년 547건 (12.5%↑)

- ☞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대상으로 교통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구간별 맞춤형으로 도로환경 개선·모니터링 지속 추진, 도로 결빙 구간에 대한 조사 및 안전시설 확충 필요

□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

- 최근 우기철에 비탈면, 옹벽 등의 시설물 붕괴로 사망사고 발생,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

*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('25.7월), 구성교 보강토옹벽 언론보도('25.9월) 등

- ☞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, 우기 대비 취약시설물 (비탈면, 옹벽 등) 집중관리 추진

□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교부 관리 및 집행 목표 달성 미흡

- 지역개발사업에 보조금을 과교부하여 보조금 반납 조치 및 보조금 집행을 감소, 사업관리 미흡으로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발생

- ☞ 사업추진일정·실집행률을 파악하여 교부계획에 따른 순차적 교부 추진 및 구역미지정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으로 사업관리 강화

□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활동 필요

- '25년 한해 점검역량·기법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강력단속 시행 결과, 위법사항 적발율 급격한 증가로 예방활동 필요성 증대

- ☞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, 연중 실시하는 맞춤형 점검 엄중 시행과 더불어 건설사업자 중심 불법하도급 등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

□ 전자카드-하도급지킴이 연계 내실화 미흡

- 현장별 전자카드-하도급지킴이 연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 개인별 '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작성 → 임금 수령'은 미흡한 수준

- ☞ 연계 내실화 추진으로 전자카드-하도급지킴이 연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도모하고 임금·근로내역 일치라는 제도 취지 달성

□ 기술자문위원 확대 및 심의운영 개선 추진 필요

- 지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분야 인력풀 부족으로 중복참여多, 자문·심의 단계부터 시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분야 위원 필수 참여

- ☞ 해당분야 위원 증원*을 통한 자문의견 다양성 확보 추진

* (현재) 안전 15명, 품질 7명, 문화재 4명 → (개선) 안전30명, 품질12명, 문화재 10명

Ⅲ.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추진 여건

- 올해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국토 조성을 위해 **균형 성장**을 목표로 지역 및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**지방 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**을 추진
- 안전한 일상과 이동 편의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**재해 예방 활동**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**스마트 국토 서비스**의 필요성 증대
-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**내실있는 안전점검**과 불법 하도급 및 공사대금 체불없는 **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**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

2. 추진 방향

- (예방중심 현장 관리)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시설물 관리·재난 대응 체계 확립, 지하안전·건설품질 관리 등을 통해 **안전사고 예방**
- (지역경제 재도약) SOC 예산 조기 집행 및 간선 도로망 확충, 지역 발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지원
- (안전하고 편리한 교통) 승격국도·개통예정구간에 ITS 구축, 초기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**교통서비스의 안전성·편의성 제고**
- (신뢰기반 건설문화 정착)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공사대금 체불 등 단속 및 **예방 활동강화**를 통해 건강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
- (행정서비스 향상)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원칙 준수, 청렴 문화 정착 및 직원들의 행정 역량 강화 추진
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정책
비전

안전으로 신뢰받고, 미래를 선도하는 충청권 국토교통 관리
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앞장서겠습니다.

방향

안전 건설 / 균형 성장 / 교통 편의 / 공정 건설 / 청렴 행정

주요
정책
과제

예방 중심 현장 관리로 안전한 충청권 건설환경 조성

- 건설현장 및 직영작업장 안전강화 추진
-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강화
- 국도공사 구간, ITS 활용 안전대응 체계 강화
- 품질분야 관리강화, 건설현장 기술지원 및 전문성 향상

국토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

-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- 균형발전·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제도로망 구축
- 충청권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

안전성·편의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

-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
-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강화 지속 추진
- 충청권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 수행
- 국토 ITS 확대 구축·운영으로 간선도로망 첨단화

공정 건설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

- 불공정행위 엄중 단속으로 준법기업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
-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업·홍보 역량 강화
- 공사대금 체불 방지로 건설현장 정상화 추진

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서비스로 국민 만족도 향상

- 기술자문위원 확대 및 심의운영 개선 추진
- 국민이 체감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한 민원 행정 구현
-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청렴, 공직기강 등 공직가치 실현
- 미래인재 양성 및 소통·화합의 직장문화 조성

1. 예방 중심 현장 관리로 안전한 충청권 건설환경 조성

1 개요

- 건설현장 및 직영작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, TBM/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제거,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
-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내용 이행조사 개선 및 전문역량 강화 추진
- 공사현장 CCTV 설치 및 ITS 연계, 인근 교통통제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·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사현장 교통안전 강화
- 건설자재 등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으로 건설 현장 관계자 전문성 향상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건설현장 및 직영작업장 안전강화 추진

- (건설현장) 최근 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사고원인 및 작업프로세스에 대한 안전취약분야 중점 안전관리
 - (취약분야 집중관리) 간부급 안전 가디언 대상 현장을 사고사례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가시설공사, 설치/해체작업을 중점적으로 관리
 - (예방활동 강화) '안전 미션지'를 활용한 작업전 TBM 실시, 위험 공정 작업 시 안전관리자와의 실시간 SNS 소통 등 예방활동 강화
 - (안전교육 강화) 외부기관(안전공단) 등 안전전문가 초빙하여 안전수칙 미준수 등 주요 사고사례 전파 권역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
- (직영작업장) TBM 실시, 위험성 평가 등 직영작업 관리강화
 - (TBM 강화) 직영작업(단속업무) 전 도로보수원 및 조종원, 과적단속원 TBM 실시, 간부급 주기적(소장: 1회/월↑, 과장: 1회/2주↑) 참여
 - (위험성 평가) 국토소 직영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집중점검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

2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강화

□ 이행조사 개선을 통한 지반침하사고 예방

-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협의완료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조사 개선을 통한 지반침하사고 예방 등 지하안전 확보
 - (대상선정) 협의완료 사업 중 지하매설물 인접 공사 및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역의 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
 - * (협의내용 이행조사) 23년40개소 → 24년45개소 → 25년46개소 → 26년48개소(예정)
 - (적기점검) '25년 이행조사 사업장 설문조사 시 개선 의견을 반영, 지반 거동 변화가 발생하는 굴착 초기에 선제적인 이행조사 실시
 - * ('25년) 연 1회 공사현황 파악 → ('26년) 연 2회(반기별) 공사현황 파악
 - ** 협의내용 결정 알림시 승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굴착예정시기 통보 문구 수록
 - (실효성 ↑) 지하수위 계측값은 지반침하와 직접 연계되는 지표로 자체 점검장비(지하수위계)를 활용하여 계측 신뢰도 확인 및 점검 실효성 증대
 - (현장관리 ↑) 계측관리 부실 및 이행조사 조치결과 미흡 현장에 대해 이행조사 재실시 등 점검 내실화를 통해 현장관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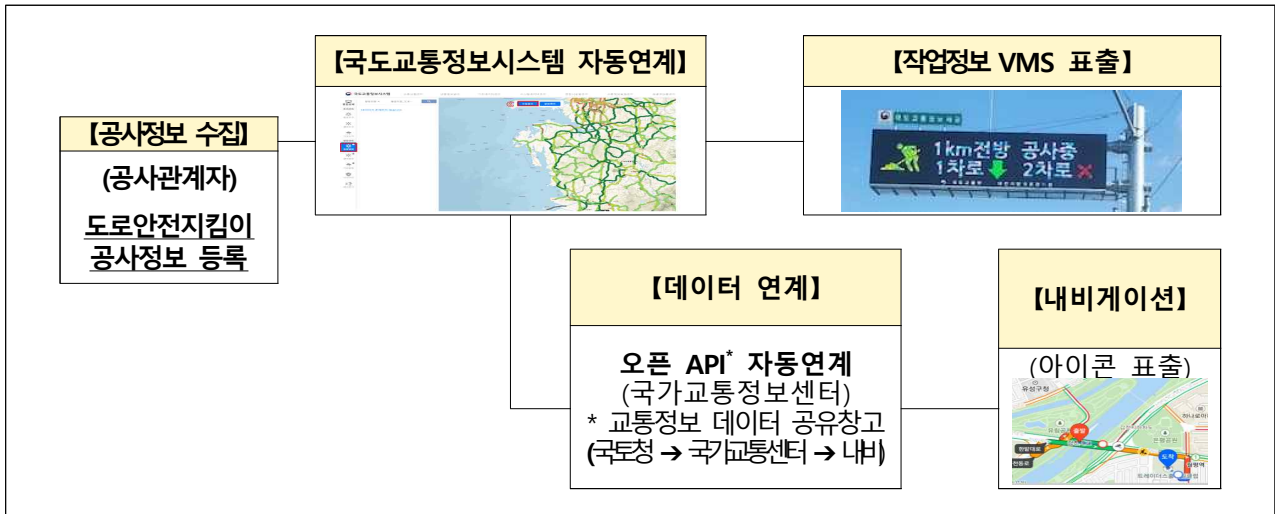
□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

- 지하개발 증가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 대응을 위해 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지하안전 확보
 - (전문성 ↑) 지하안전평가서 검토, 이행조사 등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(한국도로공사)과 합동 워크숍 실시(9월 중)
 - (관리역량 ↑)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및 지반침하 사고사례 등에 대해 승인 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 대상, 전문가 강의 등 업무 내실화 추진(10월 중)
 - (업무이해 ↑) 승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안전 이해도 제고 및 협의 내용 이행 미흡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내자료* 공유(10월 중)
 - * 점검 지적 사례 및 현장 유의 사항 등 '협의내용 이행조사 주요 지적 사례' 제작

3 국도공사 구간, ITS 활용 안전대응 체계 강화

- (공사정보 APP 연계) 국토所 공사현장 작업정보(실시간, 위치)를 입력하는 APP(도로안전지킴이*)와 ITS(국도교통통합시스템) 연계 구축
 - * 국토사무소 공사관계자(건설사업관리, 현장대리인 등)가 작업정보 입력하는 앱(건기연 운영)
- ITS센터는 작업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VMS 표출 및 내비社 전파
- (실효성 강화) VMS 표출 필요 공정^{교통차단 병행작업 등} 565건 比 등록건수는 85건(15%), 이용률 향상을 위해 현장전파 및 독려하여 이용률 70% 추진
- ⇒ 불편·건의사항에 대하여 APP 운영기관 건기연과 개선사항 회의 실시

< 공사정보시스템 자동연계 및 VMS 표출 >



- (현장 CCTV구축) 공사관리용 CCTV-ITS 연계, 現 본청→국토所 장기공사 확대 구축, 사업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*하여 안전관리 강화 도모
 - * 공사현장 고위험공정 상황파악 및 영상물 기록 유지,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
- (확대구축) 고남-창기1공구 등 9개소 CCTV 연계 完, '26년 본청 착공현장 (동면-진천1 등 4개소) 및 국토所 장기공사(병목지점, 위험도로 개선공사) 연계 추진
- 공사현장-ITS센터 CCTV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^{교통안전팀} 및 연계필요성 등을 사업부서에 주기적으로 전파하여 구축 독려

4 품질분야 관리강화, 건설현장 기술지원 및 전문성 향상

□ 품질분야 점검강화를 통한 건설현장 품질확보

- 건설자재(레미콘·아스콘) 생산공장, 우리 청 발주 건설현장, 품질기관 등 각 분야별 상시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 품질확보 강화
 - (건설자재) 부적합한 건설자재 생산근절 및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해 충청권 생산공장에 대한 자재·공정·품질·설비 불시점검* 확대(상반기 30개·하반기 35개)
 - * (점검개소) 전체 65개소: 레미콘 50개소, 아스콘 15개소('25년 60개소 점검)
 - (선정기준) 충청권 내 레미콘 공장(약 200개소) 중 우리 청 현장 (신규)납품공장 또는 KS 등록기준일순 선정(아스콘 공장은 우리 청 현장 납품공장 선정)
 - 아울러, '25년도 핵심품질사항(KS Q 8001) 지적공장(레미콘6, 아스콘2)에 대해서는 불시 재점검 실시(외부전문가 합동점검)
 - (건설현장)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에 입력된 현장품질시험* 확인을 통한 우리청 건설현장** 품질관리 확인점검(상·하반기 각 7개현장)
 - * (품질시험) 레미콘 품질시험(슬럼프, 염화물 이온량, 공기량 등), 평판재하시험 등
 - ** (점검대상) 14개현장: 품질관리계획 8개현장, 품질시험계획 6개현장
 - (품질기관) 건설자재 품질시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*에 대한 적정성 평가('26.2~4분기)
 - * 충청권 품질기관 34개소에 대해 건기원과 분담하여 점검 예정('25년 12개소 점검)
 - (전문성 ↑) 레미콘공장 현장관계자(감리단·시공사) 합동점검, 품질분야 (건설자재·시험포장*) 현장교육** (상·하반기 각 7개현장)으로 기술역량 강화
 - * 본 포장 전 현장여건(포설두께, 다짐방법, 다짐횟수 등)을 반영한 시공방법 선정
 - ** 레미콘 생산공장 주요 지적사항, 공장점검 방법, 품질시험방법 교육 등

□ 정책방향, 기술변화에 따른 업무역량 강화 적극 지원

- 정책방향,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·품질관리 업무역량 강화 적극 지원
 - (사례공유) 분기별 사망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원인, 사고 예방법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가이드* 배포
 - * 안전가이드 : 취약기(해빙기, 우기, 동절기) 각 1회, 법령 개정 시 관련 내용 포함

- (소규모현장) 관리 여건이 열악한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의무사항 및 CSI 사용방법 교육*(반기 1회)
 - * (방법) 컴퓨터 현장 실습 / (홍보) 우리청 SNS채널 및 공문 통해 교육 사전알림
-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사전예방, 현장점검업무의 내실화 등을 도모하고자 우리 청 점검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
 - (전문교육) 신입 점검요원* 등 점검자를 위한 전문기관 심화교육 및 안전체험교육**(3/4분기)을 통해 전문지식 함양 및 업무 소명감 증진
 - * (신입점검요원) : 현장점검 경험 부족 인력인 신규직원,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입직원
 - ** (교육)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건설안전점검교육, 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 등
 - (자체교육) 소규모 현장점검 확대에 따른 현장점검 시 유의사항 및 주요 핵심사항* 등을 시기별 점검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 시 실시
 - * 핵심사항 :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범위, 해당 소규모 공사에 대한 우리 청 처벌 권한 등
 - (장비활용 ↑)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고밀도·고품질점검 등 점검 내실화를 위해 공정에 따른 전문진단장비 사용시기, 사용법 교육*
 - * '25년 신규 도입장비 등 전문진단장비에 대한 교육 실시(1/4분기)

□ 충청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, 안전교육으로 사망사고 최소화

- 건설현장 사망사고 3대 원인(떨어짐, 물체에 맞음, 깔림)에 대한 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, 경각심 고취
 - * (충청권 건설사고 사망자 수) '23년 29명 → '24년 18명 → '25년 17명
(사망원인) 물체에 맞음(6명, 35%), 깔림(5명, 29%), 떨어짐(4명, 23%) 순이며, 매년 동일한 양상 ⇨ 물체에 맞음, 깔림, 떨어짐은 최근 3년 사망원인 상위 3개에 해당
- (예방교육) 충청권 중·소규모 건설공사 대상 안전의식 역량 제고 및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
 - * 외부 전문가 초빙, 공정별 유해·위험 요인 등 맞춤형 실무교육(반기 1회)
- (홍보활동) '충청 건설현장 안전지킴이' SNS 채널 개설(1/4분기)·운영 및 홍보를 통해 최근 사고사례 공유 등 안전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
 - * 건설현장 사고정보 공유·유의사항 전파, 안전가이드 등 배포

2. 국토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

1 개요

- 정부 기조에 따라 '26년을 '한국경제 대도약 원년(잠재성장을 반등+양극화 극복)'으로 만들기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
- 이동권 보장과 국토 균형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거점 간 도로망 확충으로 도로 네트워크 효율화 지속 추진
- 효율적인 충청권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통로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- '26년 재정집행목표 : 1분기 32.0%, 상반기 58.9%, 최종 95.4%
 - '2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민생경제 신속지원 등을 위한 조기집행 추진하여, 상반기 내 58.9%, 연말까지 95.4% 목표 설정
 - (국도건설사업) 발주사업(장기12, 신규7)에 대해 행정절차 사전이행, 선금 적정 지급, 약식 기성*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집행률 제고
 - * 매월 기성 원칙(여건 따라 탄력 운영)으로 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신속 재정집행 목표 달성
 - (국도관리사업) 신규사업의 신속한 발주 및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로 집행목표 달성 적극 추진

<'26년도 재정집행목표>

(억원, 재정집행액/예산현액)

구 분	1/4분기	2/4분기	4/4분기
집행목표	32.0%	58.9%	95.4%
	1,687/5,273	3,104/5,273	5,030/5,273

* 집행관리 대상 예산액 기준(본예산+이월예산)

- 월별 “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(청장주재)”를 실시하고, 신속 집행을 위한 실무자 TF회의* 추진

* 사업별 집행관리(설계변경, 예산조정, 매월 기성 등), 추진현황 점검

② 균형발전·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제도로망 구축

□ 충청권 도로망(H20) 지속 확충(일반국도 등 24건)

- 연산-두마 등 17건 준공·계속사업, 신규사업 7건 발주 및 착공 등 총 24건(2,113억원, 173.5km) 사업시행으로 충청권 도로망 지속 확충 추진
 - (준공사업) 총 5건(충남권 연산-두마 1건, 충북권 충청내륙2 등 4건)
 - * (충남) 8.54km, 연산-두마
 - (충북) 39.6km, 충청내륙2, 충청내륙3, 충청내륙4, 영동-용산1-2
 - (계속사업) 총 12건(충남권 봉정-방문 등 10건, 충북권 남일-보은1 등 2건)
 - (신규사업) 총 7건(충남권 4건 : 목천-삼룡, 화양-기산, 성거-목천1·2
충북권 3건 : 미원-문광, 부용외천-양촌, 봉양-심림1)



- ▷ (H권역) 충청내륙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 연계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
- ▷ (20권역) 편리한 순환형 교통망구축으로 충청¹⁰서부권 관광산업활성화, 주요 거점도시 연계 강화, ²⁰대전·세종·청주 대도시 광역생활권 순환 도로망 완성

- * [H권역] 충청내륙고속화도로(국도36,38,19호선) + 국도37호선 + 고속국도55호선
- * [20권역]서부권 교통망(국도40, 77호선~서부내륙 등), 세종-대전-청주 간 광역교통망
- ※ (H20 전체 723km) '24년까지 81.7%, '25년까지 89.1%, '26년까지 90.3%,

< '26년 도로사업 예산현황 >

(단위: 억원)

구분	'26년 예산	준공사업	신규사업	계속사업
계	2,113(173.5km,24건)	113(48.1km,5건)	163(50.3km,7건)	1,837(75.1km,12건)
충남권	1,650(91.6km,15건)	- (8.5km,1건)	78(22.6km,4건)	1,572(60.5km, 10건)
충북권	463(81.9km, 9건)	113(39.6km,4건)	85(27.7km,3건)	265(14.6km, 2건)

* '25년 국도건설 본 예산 2,943억원 대비 830억원 감소(28.2%↓)

□ **교통 혼잡구간 개선 및 지역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**

- (교통혼잡개선) 진천~천안~아산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1·21호선의 극심한 교통혼잡 개선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한 우회 도로망 설치



- (서북~성거) '24.09. 준공하여 공용 중
 - 사업명 :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(서북~성거) 건설공사
 - 사업내용 : L=4.4km, 4차로 신설
 - 총사업비 : 1,309억원
 - 공사기간 : 2017. 4. ~ 2024. 9.
- (성거~목천) '26년 신규사업 반영 조속 착공 추진
 - 사업명 :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(성거~목천) 건설공사
 - 사업내용 : L=13.5km, 4차로 신설
 - 총사업비 : 6,794억원
 - 공사기간 : 2026. 12. ~ 2035. 12.(예정)
- (목천~배방) 제6차 국도·국지도 건설계획('26~'30) 일괄예타 시행 중, 제6차 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총력 대응
 - 사업명 :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(배방~목천) 건설공사
 - 사업내용 : L=14.3km, 4차로 신설
 - 총사업비 6,180억원
- (좌부~풍세)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기획용역 시행 중
 - 타당성 확보 가능 노선 검토 후향, 7차 계획 반영 추진

- (지역행사지원) '26 태안원예치유박람회 방문객 편의를 위해 고남·창기 현장 내 임시 주차공간 조성, 안내표지 점용허가 등 행사 적극 지원
 - * (국제원예치유박람회) '26.4.25~5.24.(30일간) / 태안군 꽃지해안공원 일원

□ **제6차 국도·국지도 건설계획(6차계획) 적극 대응**

- (현황) 6차계획('26~'30) 국토부안 선정 후 기획재정부와 일괄예타 협의 중으로 우리 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 필요

< 6차계획 국토부안 중 우리 청 사업 반영 현황 >

(단위: 억원)

구분	총 계		일반국도						국지도							
			소 계		신설·확장		개량		국대도		소 계		신설·확장		개량	
	건	사업비	건	사업비	건	사업비	건	사업비	건	사업비	건	사업비	건	사업비	건	사업비
총계	35	38,828	26	31,043	16	15,848	5	3,285	5	11,910	9	7,785	5	5,743	4	2,042
충남	18	25,245	15	22,461	10	10,551	-	-	5	11,910	3	2,784	2	2,273	1	511
충북	17	13,583	11	8,582	6	5,297	5	3,285	-	-	6	5,001	3	3,470	3	1,531

- (대응방안) 기획재정부 일괄예타 대비 ①“6차계획 대응 광역 T/F 구성”, ②시행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

- (광역T/F 구성) 일괄예타 대응팀(대전청+광역+기초)을 구성하여 각 사업의 필요성 논리 도출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대응전략 모색

☞ 세부현장 여건, 사업별 필요성, 정책효과 및 노력도 등 정책성 평가자료 작성 및 발표 준비 철저

* (대전청) 주요사업의 논리개발, 사업계획 변경 검토, KDI 사업계획 질의, 요구자료, 종합평가(AHP) 및 발표자료 구성 및 수정 등 일괄예타 대응 총괄

** (충남·충북도) KDI 요구자료, 종합평가(AHP) 및 발표자료 작성 등

- (연구용역 활용) 충청권 지역의 교통 특성을 고려한 간선기능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6차 건설계획 수립 지원

* ① 간선기능 평가 및 도로망계획 수립, ② 안전성 평가 및 타당성 검토

□ 적기 보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

○ (보상추진) 독곶-대로, 신흥-유구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집행 최대화, 금년도 신규 사업*은 발주와 동시에 조속 보상착수

* (총 7건) 목천-삼용, 미원-문광, 화양-기산, 성거-목천1·2, 부용외천-양촌, 봉양-신림1

- '26년 준공사업*에 대해서는 잔여 보상물량 확인, 지장물 철거여부, 확정측량에 따른 보상절차 완료 등 사전점검으로 차질없는 보상 추진

* (총 5건) 연산-두마, 영동-용산1·2, 충청내륙 2~4공구

○ (보상 소요기간 단축) 조기 분할측량, 실시설계시 사전협의, 지적중첩도 활용, 보상팀 조기 투입 등으로 보상-실착공 간 시차 단축

- 사업부서 사전협의로 노선·보상대상 공유, 지적중첩 활용 기본조사

- 사업인정고시 이전 분할측량, 보상요청시 공부정리·보상준비 착수

○ (보상협의체 운영) 사업부서·현장관계자 참여하는 보상협의체 구성*으로 보상관련 주요 갈등사항**해소 및 공사지연 사전방지

* 보상과장, 해당사업부서장, 공사관리관, 감리단장, 현장소장, 보상위탁기관 등

** 예산과부족, 주요 고질민원, 미철거 지장물 처리, 잔여지 매수, 간접보상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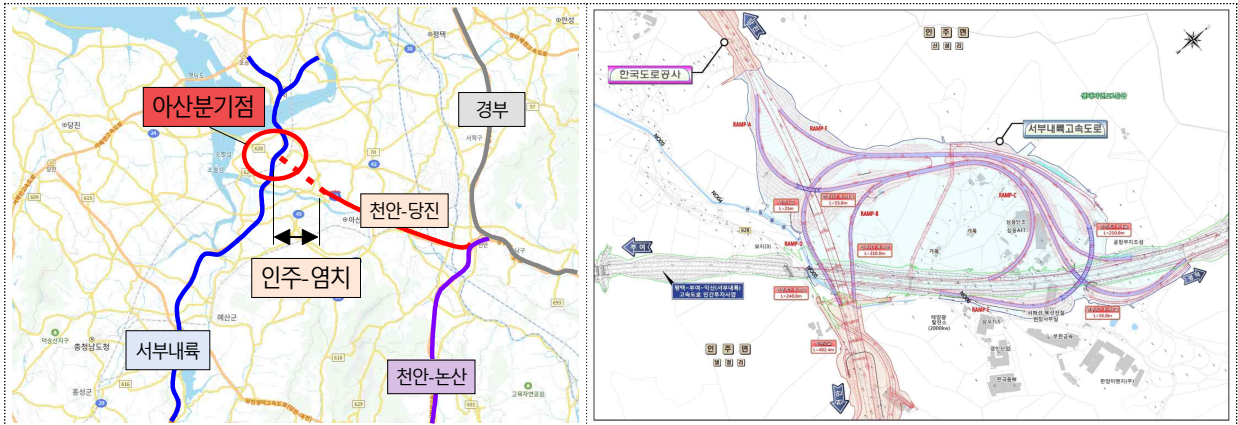
- 분기별 정기 운영, 보상 및 공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및 주요 민원 사항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

○ (소통 창구 확대) 보상설명회·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으로 토지소유자 등과 소통하고 중도위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여 조속재결 추진

3 충청권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

□ 민자사업 적극 지원을 통한 충청권 경제활성화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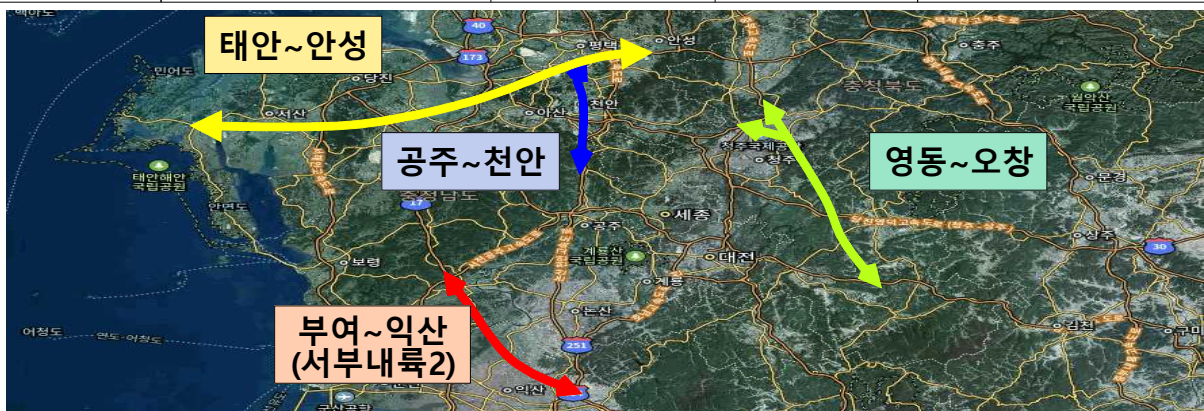
- (아산JCT 개통) 공용중인 서부내륙 1단계(평택~부여)와 인주~염치 구간('26.12준공예정, 도공)을 연결하는 아산분기점 연내 개통 추진



- (민자사업 저극 지원) 충청권내 계획된 민자고속도로·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 등 적극 지원, 원활한 물류수송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(서부내륙 2단계) 사업 착수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신속한 보상, 행정절차 단축, 지자체·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 추진

< 민자고속도로 계획 현황 >

구분	사업구간	사업규모	총사업비	비고
합 계	4건	247.8km	38,043억원	
서부내륙2	충남.부여~전북.익산	43.3km 신설	6,536억원	'29.12 착공 예정
영동-오창	충북.영동~진천.초평	70.3km 신설	16,166억원	전략환경평중('24.8~)
공주-천안	충남.공주~천안.성환	39.4km 신설	15,341억원	전략환경평중('23.4~)
태안-안성	충남.태안~경기.안성	94.8km 신설	37,078억원	적격성조사중('25.3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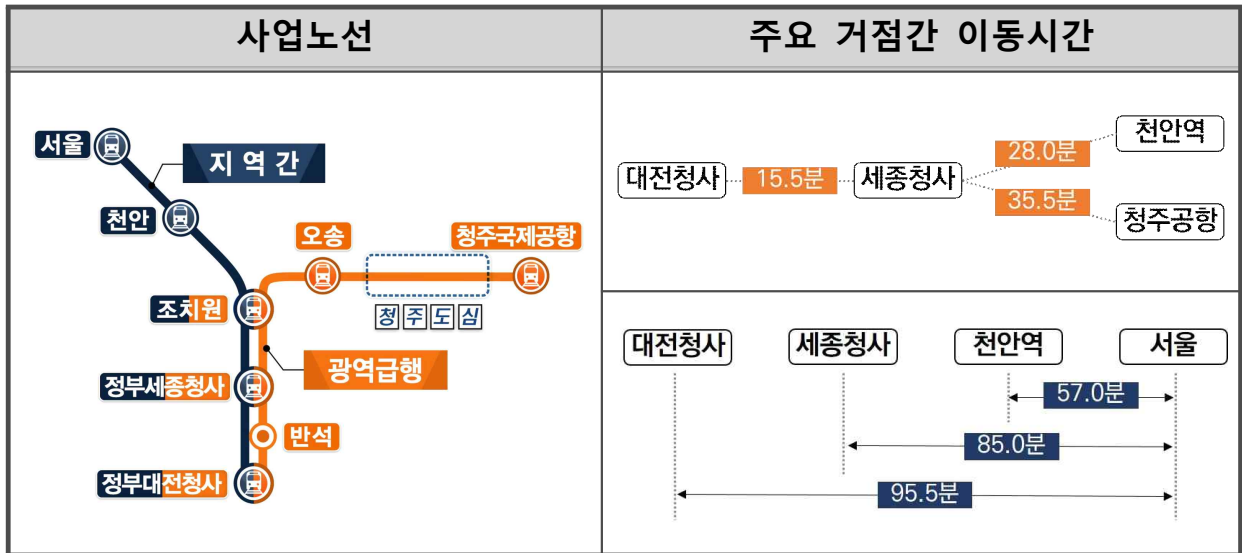


* (민간투자사업 절차) 사업제안→정책성평가→적격성조사(KDI)→전략환경영향평가 →제3자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→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→착공

- (민자철도)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 사업 관련업무 이관 시 건설 사업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행정 지원 등 적극 추진

* 민자적격성조사 통과('25.11) / 연장 64.4km, 총사업비 5조 1,135억원

** 보상·공사관리 감독 지방청 이관[민자철도 사업 관리 강화 방안('24.5, 철도투자개발과)]



□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극 추진

○ (계속사업)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등 3건에 대하여 설계가 진행중으로 건설공사 조기 착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< 국가산단 진입도로(계속사업) 추진 현황 >

구분	사업규모	총사업비 (백만원)	추진현황		비고
			산업단지	진입도로	
합 계	6.65km	96,793			
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진입도로	1.21km (2차로신설)	25,303	'23~'32 ('26.12.설계준공예정)	기본 및 실시설계 ('24~'26)	
논산국방국가산단 진입도로	1.94km (2차로신설)	22,195	'24~'29 ('24.下 실시설계 착수)	기본 및 실시설계 ('25~'27)	
세종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	3.5klm (4차로신설·확장)	49,295	'23~'31 ('26.9. 착공예정)	기본설계완료 ('24~'26)	타재 중

○ (신규사업발굴)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진입도로 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본부, 지자체, LH와 유기적인 협의 체제 구축

*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관련 진입도로 계획(국도1호선↔지방도504호선 연계)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중('25.9~'26.9)

<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현황 >

지역	후보지	선정	진입도로계획		비고 (산단 추진현황)
			사업규모	사업비	
합 계	5곳				
대전	나노·반도체 (390만㎡)	'23	3.98km (4차로 신설)	1,987억원	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중
충남.천안	미래모빌리티 (417만㎡)	'23	4.8km (6차로 확장)	417억원	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중
충남.홍성	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(169만㎡)	'23	2.2km (4차로 신설)	711억원	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('25.5~)
충북.청주	오송 철도클러스터 (99만㎡)	'23	2.0km (2차로 신설)	479억원	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중
충북.청주	오송 제3생명과학 (414만㎡)	'18	1.3km (6차로 확장)	미정	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('25.8)

* (국가산단) 사업시행자 선정 → 개발계획 수립 → 예비타당성조사 → 관계기관 협의
→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→ 사업추진

** (진입도로)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→ 기반시설 지원 신청 → 타당성 평가 →
예산편성 등 사업추진

□ 체계적 관리를 통한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및 지역 성장 지원

○ 국고보조금 집행계획·이월예산 발생 여부에 따라 보조금 순차
교부, 월별 집행현황 모니터링으로 체계적·효율적 관리 강화

* '26년 관리사업 : (충북)6개 시·군(29개 사업) 73억원, (충남)8개 시·군(34개 사업) 152억원

○ 산업단지 조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
·검토 등을 통한 실시계획의 (변경)승인 및 준공인가 신속 추진

*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등 14개소(국가산업단지^(12개소), 도시첨단산업단지^(1개소), 기업도시^(1개소))

3. 안전성·편의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

1 개요

-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·시행으로 충청권 교통안전 중추적 역할 수행
- 일상 교통 안전, 교통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
- ITS(지능형교통체계) 확대 구축 및 도로교통정보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첨단 교통정보서비스 수집·제공 대국민 소통체계 강화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

□ 도로정비·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확보

- 도로의 기능·안전성 개선, 교통편익 증대, 제설대책 및 풍수해 대응 등을 위해 '26년 도로관리사업 2,027억원 투입 예정

< '26년 도로관리사업 예산 현황(국토소) >

(단위: 억원)

단위사업명	합계	논산국토	충주국토	보은국토	예산국토
		2,027	375	589	450
도로안전 및 환경개선	832	198	249	218	167
도로유지보수	771	156	289	73	253
병목·위험도로개선	424	21	51	159	193

- (도로안전 및 환경개선) 터널 운영(위탁)관리비, 시설물 점검, 시설물 보수공사(교면포장, 단면복구, 내진보강 등), 사고잡은 개선공사 등 실시

* ('25년 실적) 터널 운영(위탁) 관리비 123억원, 시설물 점검 및 보수 1,661억원 등 총 1,784억원 투입

- (도로유지보수) 관내 27개 시군, 20개 노선(1,721km) 노면청소, 포장 보수, 차선도색, 소구조물 점검·정비 및 제설작업 등 도로기능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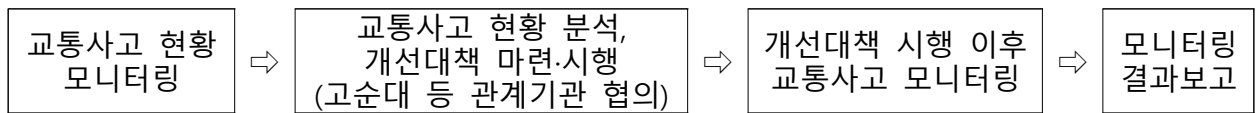
* (논산) 11개 노선, 396.7km(충주) 9개 노선, 402.7km(보은) 7개 노선, 338.2km(예산) 11개 노선, 583.1km

- (병목·위험도로 개선) 위험구간(5개소), 병목구간(30개소) 등 교통사고 우려 및 안전상 문제가 있는 지점 개선을 통한 사고 위험요인 제거
- * (논산) 병목 3개소 (충주) 위험 3개소, 병목 5개소 (보은) 위험 2개소, 병목 6개소 (예산) 병목 16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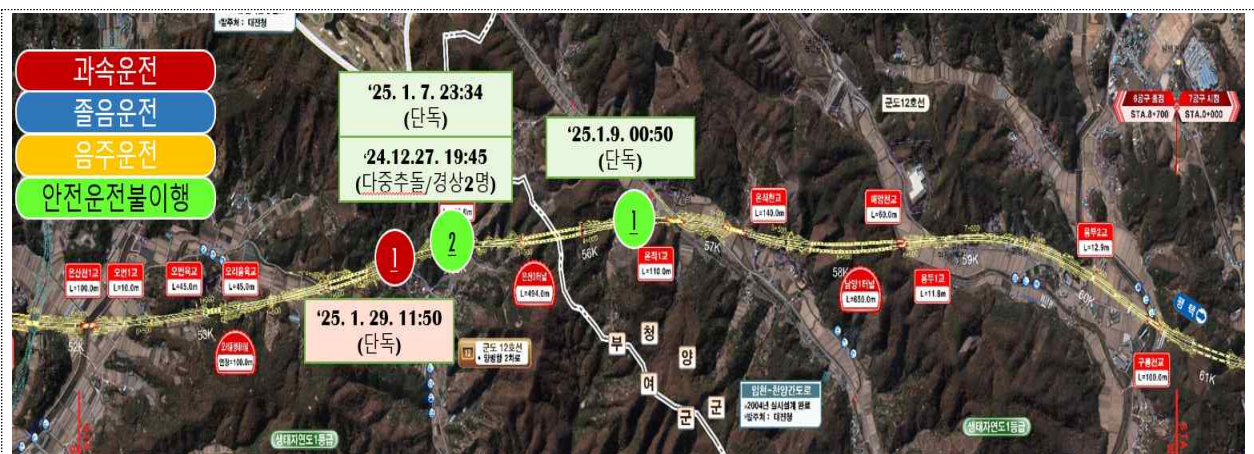
2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강화 지속 추진

□ 교통사고별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감축 추진

- ('25년 추진실적) 교통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사고다발 구간 4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개선대책 시행, 사고발생 44.5% 감소
- ('26년 추진계획) 천안-논산 등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3곳*의 '25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유형별, 시간별, 위치별로 내용 분류
- * 천안-논산(80.9km, '02.12~), 옥산-오창(12.1km, '18.1~), 서부내륙(94km, '24.12~)
- 교통사고 반복 발생 구간을 선정하여 고속도로순찰대, 유관기관의 담당자 등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 마련·시행



<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 모니터링 예시>



- * 유형별(과속/졸음/음주/안전운전불이행), 시간별, 위치별로 교통사고현황 조사·분석
- ※ 향후 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AI 사고분석 플랫폼(K-Safer)에 민자고속도로 구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 추진

□ **민자고속도로 교통통제공사(위험공종) 및 비탈면 안전관리 강화**

- (교통통제공사)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유지·보수 공사 中 사고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 추진, 「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」 준수 여부 확인
 - * 공사 유형별 교통관리(안전시설, 제한속도 등), 안전관리자 지정 및 활동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(연 2회 이상 점검 시행)
- (비탈면 안전관리) '24.12월 개통한 서부내륙 고속도로(평택~부여, 94km) 구간에 대하여 풍수해 대비 비탈면 점검 추진
 - 시득법에 의한 제2종시설물 및 공사 중 붕괴이력이 있거나 보강 시설이 설치된 비탈면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시행
 - * 민자사업은 짧은 공사기간으로 사면 절취·보강 후 변위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개통 초기단계에 절토사면 관리 중요
 - ** 개통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천안-논산('02.12~), 옥산-오창('18.01~) 구간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점검 등으로 대체하고, 사면 이상 확인 시 현장점검 별도 시행

3 충청권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 수행

□ **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통한 충청권 교통사고 예방 지속 추진**

◆ 충청권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달성*에 총력

* (충청권 교통사고 사망자) '21년 500명 → '26년 282명('21년 比 38% 감축)

- (교통안전협의체) 충청권 교통안전 유관기관* 간 협의체 운영, 기관합동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(반기별)
 - * 대전국토청^{주관}, 국토所, 광역지자체(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), 경찰청(충남, 충북, 대전, 세종), 교통안전공단, 도로교통공단, 도로공사, 운송사업조합(버스·화물), 민자고속도로^{확대}
- (국도 교통안전점검) 교통안전 점검회의(도로관리국장 주관) 개최(분기별),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* 교통추진대책 이행사항 상시 점검
 - * 대전국토청^{주관}, 국토所, 충남·북도(위임국도), 교통안전공단 등
 - ※ ('25년 실적) '25.11월 기준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84명으로 전년(119명) 比 34.9%감소(△45명)
- (특별교통대책 마련) 교통수요 증가 시기별(설·추석 연휴, 하계휴가철) 교통대책상황실 운용, 편의시설·우회도로 점검 등 편안한 교통 환경 제공
 - * (주요내용) 연휴 前 도로안전시설물 점검정비, ITS 통한 주요 혼잡구간 우회도로 안내 등

- (교통사고원인조사) 교통사고 다발구간^{2건이상 또는 중상8건이상}을 파악, 합동조사 통해 사고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선 도출, 안전한 국도환경 조성(상반기)
 - * ('26년 대상) 국도45호선 예산 덕산 대치교차로 등 5개소
 - ☞ AI기반 플랫폼(K-Safer) 활용, 복합적 위험요인 고려,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·추진
- (AI 사고분석) 교통 빅데이터 및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및 예방대책 플랫폼(K-SAFER)* 활용, 사고 고위험 구간 파악하여 최적 도로환경 개선
 - AI기반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 ⇨ 사고위험 요인 도출 ⇨ 맞춤형 개선안 제시 기술 개발·실증, 최적 도로환경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기대
 - 화물차 위험운전 행동 밀도분석 등 DTG^(운행기록정보) 활용, 위험운전지역을 파악, 운전고위험지도 제작 홍보* 추진^{3월}→효과분석^{11월}→언론홍보^{12월}
 - * 사고다발구간 및 취약지점(급가속 등) 사전위험 안내(VMS)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시 화물차 운전자에 운전고위험지도 배포 ☞ 화물자동차 사고예방 도모

□ **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·안전점검 적극 추진**

◆ **홍보활동의 실질적 효과 증진을 위해 취약요인(시기·대상* 등) 분석 후 교통안전문구 공모전,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국민참여 강화**

* 충청권 교통사고 취약요인: 고령자(65세 ↑),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

- (교통안전 우수사업자) 안전관리 등이 우수한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*, 선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
 - * (지정기준)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미만이고 동종업계 상위 5% 이내
 - ※ ('25년 우수사업자) 버스: 주식회사 신충효관광, 택시: (주)호서택시, 화물: (유)대한청정환경
- (교통수단 안전점검) 우선 점검대상 운수업체*를 대상, 교통안전 저해요인 조치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(반기별)
 - * (우선점검대상) ①지난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기준 초과, ②대규모 승객 운송 시내·시외·전세버스, ③지난 5년간 연속 3회 이상 특별점검 받은 운송사업자 등
 - ※ ('25년 총 35건 위반사항 적발) 운전자 법정교육 미이수, 퇴사 미보고, 운행기록 미제출 등
- (현장참여 홍보활동) 운송사업자 대상 업종별^{버스, 택시, 화물} 맞춤형 교통안전문구 공모전 개최, 자연스런 안전의식 실천(관심) 유도(하반기)
 - * 당선작은 교통방송 송출 및 교통안전공단·협회 등 홍보 협조(차내부착 등)
 - 화물차 차고지^{충남5개소, 충북5개소, 대전개소} 방문, 교통안전장치 장착의무 안내(월1회)

- (교통약자 찾아가는 교육) 교통약자(어린이, 고령자) 대상,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*하여,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(반기별)
 - * 교통사고분석시스템(TAAS)을 통한 충청지역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
 - ※ (25년 실적)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2회 실시(청주 남일면, 세종 지치원읍)
- (합동 교통안전 캠페인) 명절·휴가철 등 사고발생이 높은 기간*에 도로 이용자가 많은 휴게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(5회)
 - * (실시기간) ① 설 연휴, ② 봄 행락철, ③ 하계 휴가철, ④ 추석 연휴, ⑤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(관계기관) 대전국토청(주관), 한국도로공사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도로교통공단 등

4 국도 ITS 확대 구축·운영으로 간선도로망 첨단화

□ 신규개통 국도 등 지속 ITS 확대 구축

- (ITS 확대) 승격국도(25.7, 60km)* 및 신규지정 결빙취약구간(25.7, 3개소)**에 대한 ITS 구축으로 원격관제 여건 마련 및 관리체계 확보(연내)
 - * ①국38호선 태안(43km, 당초지방도603 등), ②국69호선 충주(17km, 당초지방도927)
 - ** ①국36호선 세종(1km), ②국34호선 당진(1km), ③국59호선 단양(1km, 위임국도)
 - ※ 구국도 전환 노선 內 CCTV·VSL 등 이설·재배치 시행, 사업예산 절감 도모
- (ITS 재배치) 신규 국도건설로 노선 변경된 구(舊)국도 구간에 운영 중인 CCTV 등*을 자연재난 취약관리 구간 등 사각지대에 전략적 재배치(연내)
 - ⇒ 국도 ITS 운영관리 강화(취약구간 관제) 및 예산 효율화(절감) 기대
 - * (재배치 대상수량) CCTV 13대, VMS 25대, VSL 10대 등

□ 도로교통정보센터(ITS) 운영 내실화

- (운영서비스 강화) ITS 운영설비(3,445대)에 대한 특별점검* 실시 확대 및 품질이 저하된 내용연수 초과 장비를 다기능·고성능 장비교체** 추진(하반기)
 - * (특별점검) 풍수해·설해·특별교통대책 기간 등 특수시기
 - ** 예) 기존박스형CCTV는 야간시인성이 좋지않고 AI시스템과 호환성이 취약(→변경돔CCTV)
- (통신망 감시장치 구축) 주요 통신거점에 OTDR(감시장치)* 구축, 통신망 단절 시 정확한 장애지점 파악 및 위급상황 시 조속대처 기대(3월)
 - * 광케이블 상태를 수시로 자동 측정하여 장애발생 시 세부위치를 운영자에 알림

□ **국도 도로교통상황 대국민 소통체계 강화**

- (교통안전홍보채널 신설) 카카오톡 채널 신설, ITS를 통해 수집되는 도로교통 상황(정체, 전방공사 등)을 대국민에 즉시 제공(2월)
- (교통흐름 개선) 관내 정체 잦은 곳을 분석하여, 도입부에 도형식VMS를 시범 설치하여 전방 정체 상황 사전알림 등 도로이용자 소통 강화(연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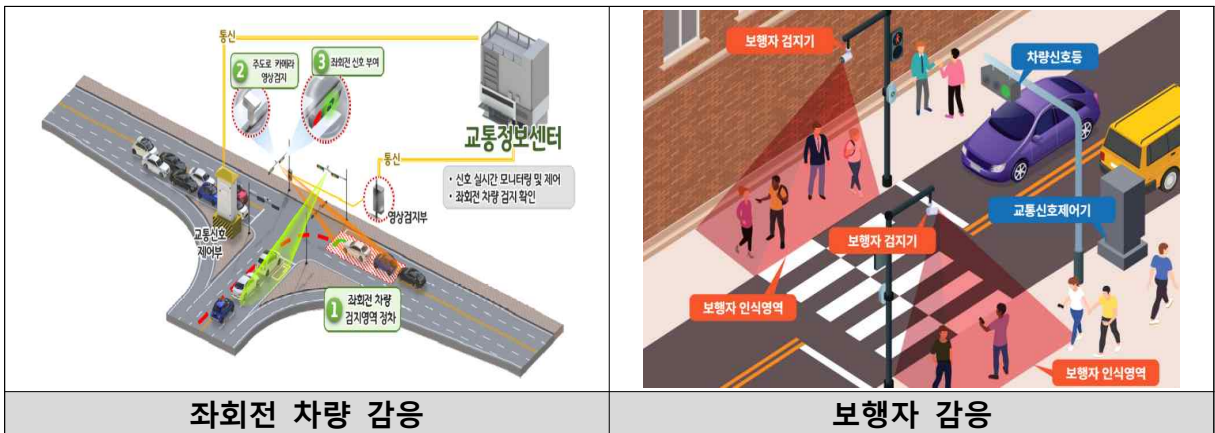
[예 시]



□ **ITS 신기술 본격 시행으로 교통상황 관리 최적화**

- (감응신호) 主 도로 직진 차량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좌회전·보행자 금지 후 필요 시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신호 제어체계 지속 구축(연내)
 - * ('26년 사업) 홍성군 소재 5개 교차로(L=21.8km), 총 사업비 2.8억원(국비 1.9, 지방비0.9)
 - '25년 구축구간 출·퇴근 차량 통행시간 13~18% 감축(출근길 18%, 퇴근길 13%)

< 감응신호 구축 >



< 추진실적('15~'25년)>

- 관내 '15~'25년 256개소(13개 시군)에 125억 원(국비) 투입, 루프식(옥천, 당진), 비매설식 검지방식(천안 등 그 외 지역) 등 구축
- * (충북^{6개}) 옥천 천안 청주 영동 괴산 제천 / (충남^{7개}) 당진 논산 보령 천안 태안 서산 청양

4. 공정 건설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

1 개요

- 국민안전 일터 조성 및 시설물 고품질 확보 견인을 위해 공정계약·준법기업이 우대받는 신뢰기반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
- 5개 국토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勞·社불문 불법행위에 대해 건설현장 단속체계를 일원화* 운영으로 건설산업 정상화 추진
 - * 공정건설지원팀-3291호('23.10.25): 업무협조 요청_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방안(안)
 - ※ 1. 勞측 주요 불법행위: 협박 업무방해 등(형법), 채용강요(채용절차법), 건설장비 사용강요(공정거래법)
 - 2. 社측 주요 불법행위: 불법하도급·불공정계약 등(건산법),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요구(건진법)
- 임금직불제, 전자카드제, 정기 체불점검 등을 통해 우리청(국토사무소 포함) 발주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방지 추진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불공정행위 엄중 단속으로 준법기업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

- (맞춤형 단속)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등 연중 상시단속과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실시
 - (상시점검) 국토부에서 국토청에 통보*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및 채용 강요,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 불법행위 점검
 - * AI활용 지표(경영재무, 하도급 정보 등 200여개 지표 분석)로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
 - (특별점검) 무자격자 참여 등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중대재해, 언론 보도, 불공정행위신고 건설현장 등 대상으로 특별·합동점검 실시
 -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라 위법사실 여부 확인 등 채증을 위해 필요시 실무협의체*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
- * (실무협의체) 대전국토청, 지방경찰청, 대전지방고용노동청,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

2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업·홍보 역량 강화

- (불공정행위 예방)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지역협의체 참여 기관을 확대·활성화하고 맞춤형 교육·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
 - (지역협의체)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대응정보 등 공유·소통을 위해 구성된 충청권 지역협의체* 확대 운영 및 간담회 정례화(반기 1회) 추진
 - * 대전청(31개 기관) : 정부·지자체(10개) + 공공기관(7개) + 건설관련 민간협회(14개)
 - 그간 공공중심으로 운영된 협의회를 건설관련 민간협회 포함·운영하여 불공정행위 단속정보 공유, 업계의견 청취 등 협업 강화
 - (교육확대)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반기 1회 추진하여 현장중심 스스로 조성하는 공정건설문화 지원
 - 국토부 주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실시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점검 노하우 등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·합동점검 참여(수시) 실시
 - 불법하도급 단속참여 점검자뿐만아니라 공공공사 계약·사업관리 담당자 등 교육 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불공정행위 조기 차단 유도
 - 건설관련 민간협회와 협업하여 관내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, 위법사례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예방교육 실시
 - (홍보강화) 공정건설문화에 대한 지속적 국민관심 유도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, 불법하도급 예방 홍보물 제작·배포
 -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(최대 200만원) 등 홍보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캠페인 실시(연 2회)
 -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점검·확인 할 수 있는 '불법하도급 예방 셀프 체크리스트(가칭)'를 제작 배포(1/4분기)

③ 공사대금 체불 방지로 건설현장 정상화 추진

- (임금직불제)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시행 '19.6.)에 따라 시행 중인 임금 직접지급제(하도급지킴이 시스템)를 전면 운영
 - 우리 청 발주 전체 현장에 대해 '하도급지킴이'를 통한 직접노무비 매월 구분 청구·지급* 추진
 - * 지급시 전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 확인·점검 시행
- (전자카드제) 청(국토소) 공사에서 전자카드시스템*(근로내역)과 하도급 지킴이(대금지급)를 연계**하여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
 - * 전자카드 단말기를 통한 근로자 출퇴근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. 공공부문 1억원 이상 공사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('24.1~)
 - ** 임금직접지급제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연계 확산 추진계획('22.3월)
 - 전자카드 의무화*를 입찰공고 단계부터 계도, 사업 중 공사정보 변경 사항(일시정지·근로자 미투입 등)을 매월 전자카드시스템에 신고 및 매월 발생 직접노무비를 발주청에 청구토록 독려
 - * 「건설근로자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(시공사)는 피공제자(건설근로자)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같은법 제26조제2항 8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고용노동부장관)
- (체불점검) 우리 청 발주현장의 노무비·공사대금(하도급·자재·장비) 지급 현황을 명절(설·추석) 전 및 상·하반기 말 집중점검하여 체불 차단 노력
- (현장교육) 신규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상·하반기 신규현장 교육 실시, 임금직불제·전자카드 활용·체불방지 등 교육 추진
 - * '25년 실적: (4.3.)상반기 신규발주현장 교육, (10.20.)하반기 신규발주현장 교육
- (폐이퍼컴퍼니 단속) 불법하도급 방지, 건설공사의 품질·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실시
 - 우리 청(국토소) 발주공사의 낙찰 예정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점검* 실시하고, 부적합**인 경우 행정처분 요청 및 낙찰자 선정 제외
 - * 기술인력, 자본금, 장비·시설(사무실) 등 건설업 등록기준 요건 충족 여부
 - ** '25년 실적: 4개 국토사무소 총 139개 업체 점검 → 7개 업체 적발

5.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서비스로 국민 만족도 향상

1 개요

-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방법 개선 및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확대 위촉 추진
-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 유형 및 처리 과정 전반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는 행정서비스 제공
- 적극적인 청렴활동 실천 및 공직사회 내·외부 부패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
-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정 인재를 육성하고 공직자 소양 및 정서함양 교육을 통해 소통·화합의 직장문화 조성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기술자문위원 확대 및 심의운영 개선 추진

- **특정공법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**
 - 심의위원 구성 및 공법 설명 등 운영방법 개선안 시범적용(‘25.3) 결과를 토대로 운영규정에 반영 추진(3월 중)
 - (위원구성) 필요시 내부위원을 탄력적(2~3명)으로 구성*하여 공공 비중 ↑, 특별히 공정성이 요구시 외부위원도 공공·학계로 한정
 - * 총 7명(내부 2, 외부 5) 구성 원칙, 내부위원이 과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
 - (공법설명) 공법 이해도 제고 및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정 공사비(50억원) 이상 공법은 참여업체 직접 설명*
 - *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업체(공법)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

□ 특정공법 적용 사유 검토를 통한 객관성 확보

○ 구조물 형식, 자재 등 특정공법 적용 필요성에 대해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공법 적용 타당성 확보

- (100억↑) 중간단계 설계자문 시 특정공법 적용 현황을 별도 작성 설명, 자문위원별 공법 적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을 별도 작성토록 보완
- (100억↓) 플랫폼 공고 전 후보모집 방침결정 시 자체 검토자료*를 작성토록 하여 특정공법(자재) 적용에 대한 근거 확보

* 공법별로 기능성, 안전성,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

□ 기술자문위원 확대 위촉을 통한 위원회의 다각화

○ 기술자문·심의의 전문성을 고려, 다양한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내실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위원 확대 위촉 추진(2월 중)

- (안전분야↑) 자문·심의단계부터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분야 위원 증원, 자문·심의 위원회 구성에 안전분야 위원 필수 참여
- (다양성↑) 지난 위원회 운영시 일부 분야 위원 인력pool 부족으로 중복참여 多, 해당분야 위원 증원으로 자문의견 다양성 확보

* (현재) 안전 15명, 품질 7명, 문화재 4명 → (개선) 안전 30명, 품질 12명, 문화재 10명

② 국민이 체감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한 민원 행정 구현

□ 수요자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

○ (분석기반 민원대응) 민원처리 현황*을 점검하여 분석 결과와 함께 민원처리 유의사항 등 각 부서 전파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 ↑(매월)

* 각 부서별 민원처리 기간, 지연율, 만족도 및 불만 민원 개선 노력 등

○ (사전정보제공 강화) 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(FAQ) 확대·정비(분기별) 및 민원사무 편람* 비치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

- 민원실 근무자에게 민원사무편람 안내교육*(2월중)을 통한 활용도 제고

* 민원사무 편람 내용 및 민원인 응대시 사무 편람 안내 요령 교육 등

□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

- (민원 지도·점검) 소속 국토사무소 민원처리 지도·점검 실시(9월중)
 - 대민접점 창구인 국토소의 민원처리 현황*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지도·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본부 민원 실태 점검 대비
- * 민원 만족도, 답변 충실도, 접수·처리 지연 현황,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점검
- (역량강화 교육) 신규 직원 및 민원 처리자 대상 민원 교육실시(4월중)
 - 민원 규정 전반, 응대 요령 등 교육을 통한 민원 대응 역량 강화
- (마일리지 제도) 민원처리 실적을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우수자를 포상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(1, 7월)

□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

- 민원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한 민원 행정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대응을 통해 민원 처리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(5월중)
 - 전년도 민원 처리 현황*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개선방안 수립
- * 전년도 민원처리 지연건수, 만족도 점수, 불만 민원 답변 내용 등
- 금년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수립 시 전년도 본부 민원 실태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* 및 추가된 평가 항목**을 반영
- * (보완사항) 민원처리 상황점검, 행정 개선 노력도(국민생각함), 전자민원 만족도 등
- ** (추가항목)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결과 기관장 보고, 대비실 이첩 민원처리적정성 등

<'25년 소속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 평가 결과>

- * 대전청 지역협력국 → '보통' 등급, 대전청 도로관리국 → '미흡' 등급
- ☞ ('26년 목표) 대전청 지역협력국 '보통' → '우수', 대전청 도로관리국 '미흡' → '보통' 등급 상향
- 최종 점검 결과는 성과관리(BSC)의 소속기관 국민만족도 평가(2점)로 활용

3] **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청렴, 공직기강 등 공직가치 실현**

□ '26년 반부패 청렴 활동 추진

○ 공직 내부 청렴 윤리의식 확립

- '청렴 자가진단의 날(매월 1회)' 및 '청렴클린데이(4월)*' 지속 실시

* 기관장 참여하에 청사 내·외부 환경정비(플래카드, 청렴어깨띠 등 활용)

- ①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및 ②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교육 실시

① 국민권익위 청렴담당을 강사로 초빙, 실제 사례 중심 업무연계 교육

②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단속, 건설공사 점검 등 부패 취약분야 담당자를 대상

-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실시

○ 공직 내·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 구축

- 부패 취약분야 집중개선 추진 회의 운영(기관장 주재, 본부지침 하달시)

- 대전청 및 국토사무소별 청렴 음부즈맨* 운영 및 권고사항 이행

* (구성) 연산-두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공사관계자 3명, (위촉기간) ~'27.6.29.

○ 우리 청 외부 청렴 활동 지속

- 대전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(대전 소재 50개 기관) 청렴 동행 활동* 참여를 통해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신뢰도 향상

* 합동 캠페인, 지역행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 관심 유도 및 기관 청렴이미지 제고

<'25년 반부패·청렴시책 평가 결과>

· 최종 평가 결과 소속기관 중 2위로 기관 장관표창 및 포상금(40만원) 수령

* 우수 4개 기관(서울·대전국토청, 부향청, 인재원), 보통 6개 기관(부산국토청, 서울·제주항공청, 철도경찰, 지리원, 향분), 미흡 2개 기관(원주·익산국토청)

□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

○ (복무관리) 공직기강 해이, 복무·보안관리, 제설·수해 등 비상상황 대비 실태 등을 자체 불시점검 실시(명절기간 중 연2회)

* [전년도 실적] 상반기('25.1.19.~1.31.) / 하반기('25.11.17~11.28.)

- (휴직점검)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
 - * (분기) 육아휴직·질병휴직·유학휴직 (반기) 해외동반휴직·가사휴직·연구교육휴직
- (초과근무) 연가·당직근무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기간 중 실적 등록 등 초과근무수당 수령 실태 점검(1월, 7월)
- (유연근무) 출퇴근 미지정 등 반복 지적사항 주기적 점검 실시(월1회)
 - ☞ 부서별 유연근무 자체 점검(전담 지정) 및 패널티(별당직, 유연근무 금지) 부여 등을 통해 월별 위반 사례가 50%이내로 감소되도록 적극 관리

4 미래인재 양성 및 소통·화합의 직장문화 조성

□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개

- 소극·관행적 업무 처리에서 탈피하고 창의·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계획 수립(26.2월중)
 - 부서별 각 분야 직무교육* 수립을 총괄·지원 → 직원들이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
 - * 계약·보상·설계·안전 등 분야별 연간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
 -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효율·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서 작성, 아이디어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AI 실무 교육* 제공(반기별)
 - * 인공지능·생성형 AI 기본의 이해, 실무 중심 AI 활용 교육, 공공기관에서의 AI활용가이드 등
- ⇒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인공지능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

□ 신규직원 조직적응을 위한 지원강화

- (직무교육) 청렴·민원 등 공직자 필수 교육부터 현장견학을 동반한 공사감독·안전관리 등 부서별 고유업무까지 다양한 직무교육 실시(4월)

- (멘토-멘티제) 교육 중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규자가 다양한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마련
- * 동일 직렬 별 1:1로 멘토·멘티 지정(멘티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나이 등 고려)
- (적응지원) 신규직원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운영지원과장 주재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 지속 청취(3, 9월)

□ 소통 · 화합의 직장 문화 조성

- 활발한 소통 관계와 즐거운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강연 개최(반기별)
 - 직원 관심도가 높은 여가 활동 강사를 초청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
 - * [예시] 원예(테라리움 만들기), 공예(캔들 만들기), 요가(싱잉볼 체험) 등
- (심리상담의 날) 전문 상담기관(대전정부청사 마음건강센터)에 의뢰하여 상담사와 직원이 1:1로 상담하는 개별상담 진행(매분기)
 - * [전년도 실적] 25년도 1분기('25.3.24.), 2분기('25.6.30.), 3분기('25.9.4.) 실시